

軍 통수권 여전히尹 손에...대북 대비태세 문제없나

유사시尹의 통수권 행사,軍 명령 복종 등 불투명 불확실성 해소 필요...야당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 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각을 다루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령과 탄핵안 표결 무산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담화 발표 직후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 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테스트코스(TF)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전날 이후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탄핵 물린 이상민 행안장관 자진사퇴...尹 사의 수용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태원 참사' 탄핵 기각 후 1년5개월 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 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안장관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험·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

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대표적인 장수 장관이다.

그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년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중앙대 4년 후배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중앙파'로 불린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했던 2022년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새 정부 출범을 준비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내란죄 수사 칼날에 대통령실 사면초가

김·경, 김용현 긴급체포·압수수색...공수처 사건 배당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수사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전 장관의 공판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

고 사안을 수사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대통령실경호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 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진수 기자

우 의장 "총리·여당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명백한 위헌"

한덕수·한동훈 정국 수습 비판... "권한 이양 국민 주권 원칙 따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을 두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지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

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며, 만나자는 한 총리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계엄 사태 여파로 협상 중단 상태에 놓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김건희 특검법' 2표 차 부결...자동 폐기

세번째...국회, '부결 당론' 확정 뒤 반대 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이뤄

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외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재의요구권(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김진수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가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24타경 5510	1	강진군 군동면 군장리 197 동식물관련시설 1층 143㎡ 2층 108.06㎡	97,740,420	97,740,420	일괄매각, 목록2현황근부지, 전용허가이부여, 준, 동면사실조화신사증조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1188-3 338㎡ [농지취득자격증명외] [물건번호1:비닐하우스제외]	3,563,511,760	3,563,511,76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수목, 제시외기계기구 [매립형계근대] 포함
2024타경 5633	2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195 1538㎡	3,563,511,760	3,563,511,76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수목, 제시외기계기구 [매립형계근대] 포함
		강진군 작천면 공갈리 575-17 단층 4818.78㎡ 부속건물 단층 394㎡ 사무실및주택 1층 61.2㎡ 2층 57.6㎡ 단층 관리사 105.5㎡ 제시외건물 44.4㎡	278,000,000	278,000,000	다세대
2023타경 6301	1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1-1 111 동 201호 72.06㎡ [대지권미등기, 대지권유무알수없음, 최저매각가격대지권가격포함]	85,000,000	85,000,000	2024타경5527 [중대지권] (사용이승인건물, 로컨축출물대장없음)
2024타경 5176	1	장흥군 대덕읍 가곡리 1125-12 1140.6㎡ [1125-13번지외합병행사용중]	23,838,540	23,838,540	농지취득자격증명
		강진군 최정면 영동리 562 545㎡ [맹지]	19,901,000	19,901,000	목록2지분매각, 주목목향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외
2024타경 5558	1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291-30 308㎡	18,788,000	18,788,000	유연물매각제외

● 공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치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인접상행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측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점유유무는 매수신고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12. 28. [월] 11: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12. 30. [월] 11:00

4. 매각장소 : 경주시 법원 1층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가장양행표를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등 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용기관 발행의 지각일부도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득자를 제출한 면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공인 이상이 공적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영학하게 표시하여 함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며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공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대상으로 추가경매를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최후유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출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처가 및 대금납부

① 매각처는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매각대금 및 기타 비용은 매각결정기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요일과 휴일 중 한 날이 매각대금 및 기타 비용, 비용의 납부기한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료등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료공과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취득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국외소재국립행정관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권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료등 동시 발생 날로부터 먼저 주된유동권설정고지 하고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시중유동권설정고지 받은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입찰신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매각허가(주요 건물)의 현황을 반드시 입찰신청서 및 입찰신청서 첨부인사 증명서(사)에 기재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영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입찰명령에 나오지 않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신청서와 동봉된 신청서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여도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결정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 법원 확정판결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